



카카오 먹통 사태를
둘러싼 논쟁

2, 3면

알렉스 캄리니코스 논평
트러스 영국 총리 사임이
보여 주는 것

3면

이란
반정부 시위

7면

조르자 멜로니가
소환한 무솔리니
어떻게 집권했나

8~9면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12면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는 법치 앞세운 권위주의 결국 노동운동과 좌파도 겨냥할 것이다

관련 기사 5면

카카오 먹통 사태

시장 경쟁과 독점 규제, 둘 다 해결책이 아니다

장호중

10월 15일 카카오 먹통 사태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과 걱정, 불안을 겪었다. 초대형 IT 기업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카카오는 국내 IT 성공 신화의 대표 격인 기업이다. 창업 10여 년 만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올라섰고, 연 매출은 6조 원이 넘으며, 130개 가까운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4700만 명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이지만, 카카오는 그 이용자들이 자사의 각종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큰 성공을 거뒀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공룡들과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방대한 양의 이용자 정보를 플랫폼 기업에 팔아 수익을 얻는다. 그 이용자 정보를 구입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카카오의 자회사이다.

사실 구글과 페이스북도 최근에 각각 알파벳, 메타라는 이름의 모기업을 두고 여러 자회사를 만들어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기업 실패에 불과?

사고 직후 언론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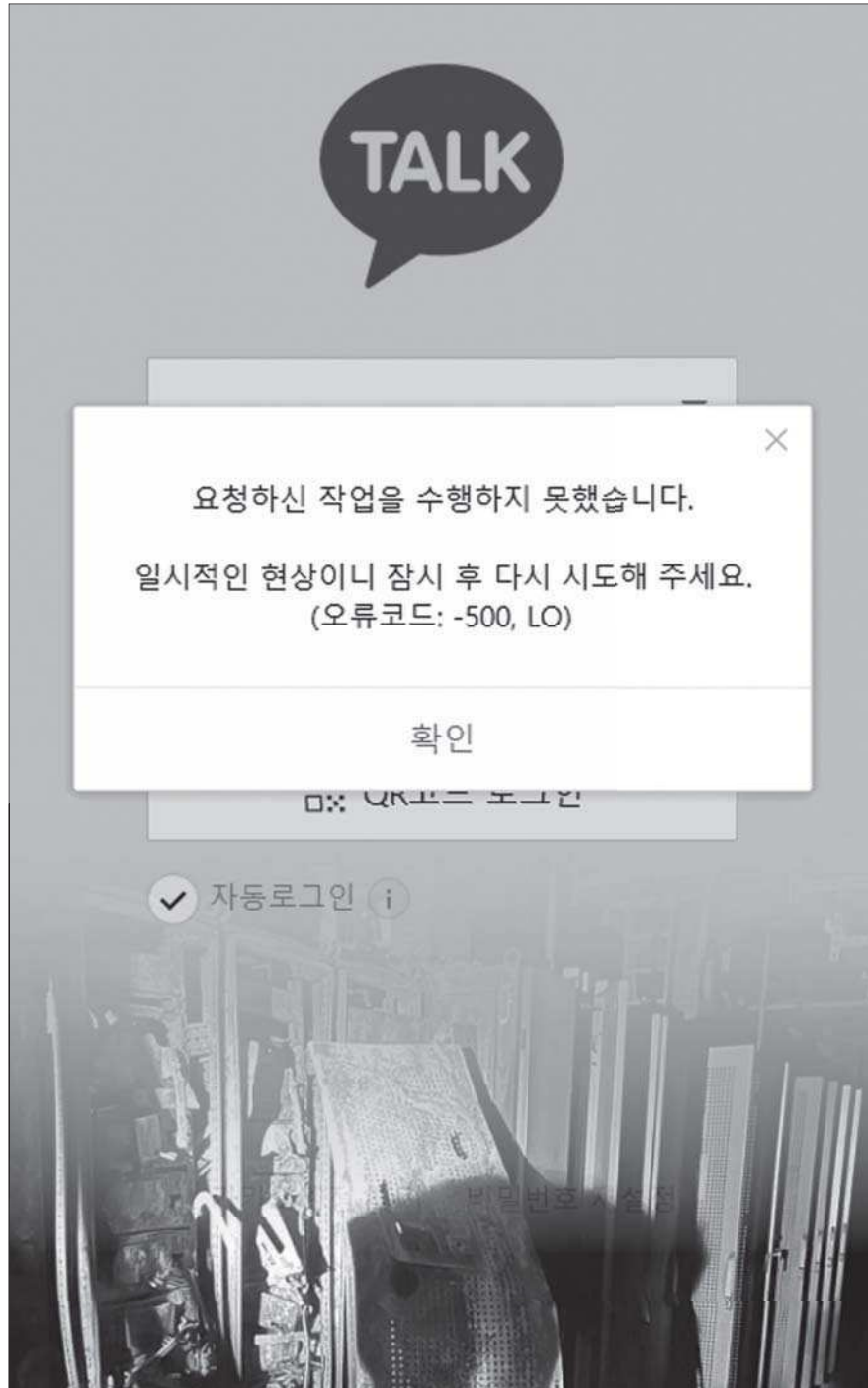
〈한국경제〉 같은 노골적인 기업주 언론들은 이번 사태가 독(과)점 규제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시스템 안 갖춘 ‘기업 실패’의 문제 … 플랫폼 때리기로 흘러선 안돼”(10월 18일치).

단기 수익에 매달리느라 필수 투자를 게을리한 카카오 경영진의 문제일 뿐, 규제가 필요한 제도적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카카오가 플랫폼 사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 ‘이원화’를 하지 않아 사고가 커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서버가 마비될 경우 모든 기능을 대체할 서버가 상시적으로 준비돼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아 사고가 커졌다는 것이다. 카카오와는 달리, 네이버는 다른 데이터센터에도 서버를 마련해 놓아 비교적 신속하게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같은 조건 하에서도 ‘기본’을 지킨 기업주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경쟁력을 갖게 되는 셈이니,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경쟁을 강



필수 서비스가 이윤 시스템에 맡겨져 있는 한 이런 사고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강화는 해외 기업들의 경쟁력만 키워 줄 뿐이라는 우려도 덧붙인다.

이러한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이 이번 같은 문제들을 자동으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카카오가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장주의자들이 말하는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은 신화일 뿐이다.

카카오는 서버 이원화보다 인수·합병에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 이는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카카오의 성장과 이번 사고 이후에도 카카오에 투자가 계속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어쩌다 한 번 날지도 모를 사고’에 대처하려고 데이터

센터 구축을 우선하는 것은 성장의 기회를 놓칠 일일 것이다.

사실 국내 IT 기업들 대부분이 카카오 수준의 복구 시스템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국내에서는 제1금융권의 전산센터에만 최고 등급의 이원화 조치가 의무화돼 있다(지디넷코리아, 10월 17일치).

네이버도 만약 이원화 구축에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한 초대형 메신저 서비스를 운영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

진정한 문제는 통신, 교통, 금융 같은 필수 서비스가 이윤 시스템에 맡겨져 있는 상황 자체에 있다.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일수록 기업들은 더 쉽게 이윤을 벌 수 있지만, 그들은 세계적 경쟁 속에서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압

력 때문에 그 서비스의 질은 점차 나빠지고 불안정해지며 쓸 만한 서비스의 가격은 비싸진다.

실제로 IT 대기업들의 서비스 중단 사고는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일어났다. 아마존, 페이스북 등도 단전이나 서버 오류 등으로 서비스가 마비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시장 경쟁은 이런 기업들이 이미 겪은 오류를 다른 기업들도 똑같이 겪도록 방치한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플랫폼 자율규제’를 내세웠다가 대중의 불만을 의식해 ‘최소한의 개입’은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이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대통령실은 하루 종일 규제 강화 계획이 없다며 말을 주워 담느라 애썼고, 국무총리 한덕수도 “법률 개정 사항은 아니다” 하고 선을 그었다.

독(과)점 규제로 되나?

한편, 〈한겨레〉, 〈경향신문〉 등 진보계 언론들은 독(과)점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업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인수·합병의 기준을 높여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독과점 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필수 서비스의 중단 같은 일들을 피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IT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기업에 서버 이원화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조치는 상대적으로 작은 IT 기업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돼, 오히려 독과점 기업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낸다. 시장의 역설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독(과)점의 형성, 즉 마르크스가 말한 ‘집적(개별 자본 규모의 성장)과 집중(경쟁 자본의 수감소)’은 필연적이다. 패자는 퇴장하고 승자는 몸집을 키운다. 자본주의 자체가 자본들의 축적 경쟁을 동력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자본이 새롭게 축적되고 확장되는 부문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은 결국 독점적 지위를 획득했다.

IT 산업 부상 이전에도 철도, 자동차, 석유, 금융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때마다 독점을

▶ 3면으로 이어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트러스 정부의 몰락이 드러낸 두 겹의 위기

현재 영국 보수당 정부의 위기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상태를 잘 보여 준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크리스나 구하는 이렇게 지적했다. “금융 시장이 자체의 중앙은행이 있는 선진국 정부를 굴복시켜 핵심 재정 정책 목표를 포기하게 만든 것은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두 가지 커다란 추세에서 비롯한 일이다. 첫째, 역사적으로 중요한 영국 자본주의 정당인 보수당의 쇠락이다.

보수당이 2017년과 2019년 총선에서 승리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기이해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때 보수당은 1980년대~1990년대 초에 누리던 수준의 득표율과 득표수를 회복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보수당은 심각하게 분열했고 전통적인 기업 기반으로부터 갈수록 이반했다. 당내 우파가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2016년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에서 뜻하던 바를 이뤘다. 보수당·자유당 연립 정부가 추진한 긴축 정책에 크게 힘입은 결과다.

다른 나라의 중도우파 정당들도 지난 15년 동안 혹독한 경제 불안정과 이글거리는 대중의 불만속에서 쇠락해 왔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에 따른 정치적 혼란 끝에 보리스 존슨이 총리직을 거머쥐었다. 존슨은 강경 브렉시트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해 2019년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 순전한 기회주의자인 존슨은 이후 국가를 이용해 경기를 부양했다.

그러나 존슨의 직무유기와 부패로 그 정부는 처음에는 마비됐고, 그 뒤 무너졌다. 브렉시트를 두고 당내 투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난 시점에서 벌어진 존슨의 몰락은 보수당을 산산조각 냈고, 보수당은 주로 상대에 대한 증오로 뭉쳐 있는 파벌들로 전락했다.



“시장이 거부한 자유시장주의자” 44일만에 사임한 트러스 총리

덕분에[방황지정 속 어부지리로 — 옮긴이] 리즈 트러스와 퀴지 콰텅이 이끄는 조그마한 초(超)대처주의 그룹이 주도권을 쥐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패거리의 두 번째 커다란 추세에 부딪혔다. 그것은 값싼 자금의 시대가 적어도 당분간은 끝났다는 것이다.

2007~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래로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극도로 낮게 유지하고 찍어 낸 돈을 경제 시스템에 풀어서 자본주의가 다시 위기에 빠지는 것을 간신히 막았다.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2020년에 시작된 급격한 물가 상승을 잡으려는 움직임에 앞장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금리를 올렸고 이는 다른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면서 금융 시장과 경제 정책 결정 과정이 불안정해졌다.

보수당 정부의 전임 총리인 데이비드 캐머런과 보리스 존슨은 영국 중앙은행을 안전장치로 삼고 거기에 의존할 수 있었다. 재앙을 피하는 데 필요한 값싼 자금을 중앙은행이 제공해 줄 것

이라고 믿고서 말이다.

그러나 트러스와 콰텅은 자신들이 현 중앙은행 총재인 앤드루 베일리에 게 의존할 수 없음을 알게 됐다.

베일리의 우선순위는 다른 중앙은행장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해결이라는 신임을 유지하고 금리를 계속 높이는 것이었다.

콰텅의 재앙적인 [대규모 감세 정책 등] “재정 이벤트”는 정부가 바로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했다.

콰텅은 정부 부채를 늘려서, 줄여든 세금을 매우려 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 추가 부채의 비용은 훨씬 비싸졌다.

그에 따른 패닉이 영국의 여러 연금 펀드를 위협하자 베일리는 영국 국채를 사들이는 개입으로 연금펀드를 구제했다.

그러나 베일리는 지난주 금요일(10월 14일)까지만 국채를 매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많은 논평가들은 이를 콰텅을 궁지로 몰기 위한 책략으로 풀이했다.

이제 콰텅은 사임했고, 트러스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이 글은 트러스가 총리직을 사임하기 전에 쓰여졌다. — 옮긴이] 그러나 보수당에 재출발의 희망은 없다. 지난 몇 주 동안의 소동은 영국 자본주의의 장기적 취약성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을 드러냈다. 특히, 막대한 국제수지 적자를 매우려면 해외 차입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가 드러났다.

새 재무장관 제러미 헌트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트러스가 헌트를 자를 처지가 못 되기 때문이다. 트러스가 보리스 존슨의 숙청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유럽연합 잔류파의 한 명인 헌트를 재무장관으로 지명해야만 했다는 사실은 트러스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한 전직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헌트는 정부의 최고경영자 구실을 할 것이다. 총리의 구실은 이사회 의장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리고 이번 월요일(10월 17일)에 헌트가 발표한 긴급 패키지는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감세를 철회하고 긴축을 시행해서 700억 파운드 규모의 정부 재정 공백을 매우겠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이 올라 영국의 180만 가구는 소득의 10분의 1을 잃게 될 것이다. 트러스와 콰텅이 보잘 것없는 인물로 마땅히 잊혀지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저질러 놓은 대처주의 정책의 대가를 오랫동안 치르게 될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27호 / 번역 이원웅

▶ 2면에서 이어짐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설사 독점 기업을 (형식적으로) 분할한 경우에도 과점 상태가 유지됐고, 그 과점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은 더 커지는 경우가 흔했다.

이 과정에서 흔히 정부는 독점을 규제하는 주체로 여겨지지만, (주로 제국주의 경쟁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자국 기업과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정부

는 독점 기업을 보호하는 구실을 더 많이 한다.

예컨대 2020년 미국 의회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을 청문회에 불러 적대적 인수·합병과 지배력 남용을 지적하며 들들 볶았지만, 실제로 이들의 시장 지배력에 영향을 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중국의 거대 IT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실, 카카오와 네이버의 문어발식

확장을 각종 특혜와 예외 적용으로 도운 것도 다름 아닌 역대 한국 정부들이었다.

필수재와 생산이 경쟁적 축적에 종속된 자본주의하에서 이번 같은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식량이나 에너지처럼 생존과 직결된 자원조차 이윤 시스템에 종속돼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을 보라.

그래서 독과점 규제는 그 목적인 바

를 이룰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흔히 지배자들이 체제의 근본 문제를 교묘하게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IT 기술의 발전은 세계적 규모에서 생산과 분배를 조정할 잠재력을 더욱 높였다.

그러나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 생산이 조직되는 사회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치솟는 금리, 부동산 침체로 급속히 커지는 금융 불안정

강동훈

금리 인상의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불안정해지고 있다.

특히, 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연쇄적으로 부실해져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2011년에도 저축은행들이 무분별하게 늘려 온 부동산 PF 대출이 부실로 드러나면서, 많은 저축은행이 도산하고, 많은 사람들이 평생 모은 돈을 저축은행에 맡겼다가 막대한 손해를 본 바 있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올해 6월 기준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12조 2000억 원에 이른다. 2013년 말에 견주면 3배 규모다. 정부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은행권 대출이 6조 9000억 원 증가하는 동안, 제2금융권은 70조 1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반면,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있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3만 2722채로, 지난해 말(1만 7710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PF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특히 증권사들의 상황이 심각하다. 중소형 증권사들뿐 아니라 메리츠증권·삼성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들도 3조 원 내외의 PF 관련 대출 때문에 위기감이 고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금융 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조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PF 대출을 묶어 다시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유동화) 서로 사고 팔았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하면 도미노 식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9월 말 강원도가 지급보증 했던 춘천 '레고랜드' 건설 PF가 부도가 나면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게 됐다. 신용도가 높은 지자체의 부동산 PF가 저 지경이니 민간기업 PF는 더더욱 믿을 수 없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은 부동산 PF 대출을 아예 중단했다. 은행권이 대출을 옥죄자 제2금융권도 PF 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 연장 조건으로 연 10~20퍼센트의 고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최대한 대출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PF 대출을 줄이자 부동산 시장은 더욱 경색되고, 이는 다시 PF 대출을 부실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PF 대출이 중단되면서 건설사들의 부도 위험도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탄탄하다고 알려진 롯데건설·GS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 등의 대기업 계열 건설 회사들도 건설 사업 착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서 향후 부실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부동산 PF 시장이 급속하게 경색되면서 다른 기업들의 회사채 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이달(10월) 회사채 발행액은 19일까지 1조 2362억 원으로 올해 1월(8조 7710억 원)의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금리는 급등했다.

한국은행이 10월 19일 발표한 '2021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한 '좀비기업' 비중이 40.5퍼센트를 기록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를 겪은 2020년(40.9퍼센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특히 정보통신, 부동산 등에서 한계기업이 늘어났다.

이처럼, 부동산 PF 대출과 기업 대출이 짝 맞으며 금융위기 불안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급히 개입하고 나섰다. 10월 20일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화펀드'를 다시 가동해 1조 6000억 원을 금융 시장에 투입하고, 향후 최대 20조 원어치 회사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정부 개입으로 시장은 잠시 안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퍼펙트 스톰"으로 수출 감소 등 실물 경제 타격이 심화하면 한국의 금융 불안정도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위안화와 엔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며 동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그중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이 꼽히기도 한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다급히 연금 개악, 노동 개악, 공공부문 효율화 등에 집중해,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벌어진 생계비 위기와 고통 전가에 맞서, 금리 인하와 부채 탕감, 임금·일자리·복지 방어를 위해 광범한 투쟁이 건설돼야 한다.

고금리, 가계부채 때문에 가중되는 서민 고통

금리가 급등하면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도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우리 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은 1869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급히 집을 마련한 사람, 치솟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1년 전에만 해도 2~3퍼센트였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는 이미 6퍼센트대로 올라섰고 올해 안에 8퍼

센트로 오를 공산이 크다. 전세자금대출로 가랑 2억 원을 빌린 사람이 내는 이자는 월 50만 원에서 월 130만여 원으로 치솟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4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준비한 25조 원 중 20조 원 이상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출 조건을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의 주택 평균 시세가 7~8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전세대출은 담보가 없고 대출 기간이 2년으로 짧아 정부는 저금리 전환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대상 대폭 확대와 전세대출·자영업자·청년 등 3대 가계부채 위험군에 대한 종합 대책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엄청난 이윤을 거두고 있는 은행들로부터 수익

을 환수해 청년,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가계부채를 탕감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은 '가계부채119센터'를 만들어 가계부채와 빚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채무상담을 하며 대중 운동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런 운동이 성과를 거두려면 생계비 위기와 고통 전가 공세에 맞서는 더 광범한 대중 저항으로 확대돼야 한다. 그러려면 대출 금리 억제와 부채 탕감 같은 좀 더 급진적인 대안을 내놓고 더 폭넓은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주사파”는 코드명일 뿐 윤석열이 말하는 함께 잘사는 나라에는 기업과 부자의 자유만 있고, 노동자 등 서민층의 미래는 없다

윤석열 정부의 이재명 대선자금 수사는 법치 앞세운 권위주의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10월 19일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의원단이 당사로 집결해 압수수색을 막으며 검찰과 대치했다.

검찰은 21일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의 수혜자인 민간 개발업자들에게서 8억여 원이 김용에게 갔고,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자금과 조직 관리 등을 맡았던 김용이 이 중 6억 원을 이재명의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한다. 이에 이재명은 특검을 공개 요구했다.

정치인들의 정치 자금 문제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파 정부의 검찰이 중도파나 좌파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을 수사할 때는 심중팔구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

그 경우, 부패 척결이나 법치, 정의 구현은 그 정치적 목적을 가리기 위한 명분일 뿐이다. 정의 구현이 목적이라면, 대장동 수사는 윤석열을 포함한 우파 정치인들로도 확대됐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우파와 더 친한 검찰은 위기에 처한 우파 정부에 유리한 정치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적 경쟁자들의 비리 사실/의혹을 수사할 때가 많다.

2008년 촛불 운동으로 취임 첫해부터 지지율이 폭락했던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비리 의혹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던 것에도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다.

좌파 정치인을 제거하는 데도 정치자금 수사가 이용된다. 2018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수사하던 특검이 난데없이 수사 대상과는 무관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정치자금을 캐내어 폭로한 것도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지금 검찰의 이재명 수사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요란하게 진행되는 성남FC(시립 축구단)와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에서는 정치자금이 직접 오간 증거들이 나오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20퍼센트대인 낮은 지지율 위기를 권위주의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법치를 명분으로 이재명을 탄압하고 있다.

그 공격의 칼끝은 민주당뿐 아니라 장차 노동자 운동과 좌파를 향할 것이다.

물론 이전 민주당 정부가 (우파가 위선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동해 탈북 어민 강제 복송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취한 조처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노동자 연대〉는 이 점을 명확하게

비판했다. 즉, 동해 사건은 탈북 어민들을 난민으로 보아 한국 사회에 수용하고, 한국의 사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면 될 일이었다. 그렇게 처리한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면파하려고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월북 시도로 단정지은 사건이다.

그러나 사건 당시에 우파 정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처리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위선적이게도 정국 반전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는 것일 뿐이다.

개약 동력 확보

검찰이 민주당 압수수색에 나선 19일 낮, 윤석열은 국민의힘 지역 위원장들을 만나 사실상 민주당을 겨냥한 ‘주사파 발언’을 했다.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얼마 전에는 (윤석열이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 임명한) 김문수가 문재인을 열토당토않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출세한 고위 관료 출신이고, 민주당도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었는데도, 그런 민주당을 가리켜 “중북 주사파”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위기에 우익적으

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은 지난여름에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노동자 등 서민층 공격의 첫발을 떼자마자 지지율이 추락했다. 그뒤로 윤석열의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권 지도부는 북한의 연쇄 미사일 발사 등을 핑계로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 군국주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반대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국가 안보를 내세워 우익 민족(국민)주의를 부추기고 정부에 대한 반대를 권위주의적으로 억압하려는 전략과 연결돼 있다.

최근 윤석열은 취임 초 발표한 120개 국정과제를 20여 개로 간추려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리스크 관리, 연금 개악, 노동 개악, 공공부문 효율화(민영화와 인력 감축 포함), 핵발전 강화 등 하나같이 기업주들의 이윤과 권력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들이다. 화물연대와의 제도 개선 합의도 번복하려 한다.

바로 이런 개악 공세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을 정조준하고 공권력 강화를 기도하려고 한다.

이런 전략을 도우려고 ‘아스팔트 보수(가두 우익)도 다시 거리로 나섰다. 10월 10일 전광훈이 주도한 서울 광화문 집회에는 수만 명이 모였다.

김문성

나토·러시아, 동시 핵 훈련

인류를 핵 악몽으로 몰아가는 동·서방의 전쟁광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 내 핵심 목표물(크림대교)을 폭파하고, 러시아가 키예프(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보복 폭격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이 위협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12~13일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변함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태세가 돼 있으며,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

“나토의 핵계획그룹 회의가 열릴 것이다.

“탄도·순항 미사일과 드론 등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선 장거리·단거리 등 다양한 방공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는 도시들이 많은 큰 나라여서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나토 국방장관 회의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 그룹’ 회의가 열렸다. 우크라이나 국방 연락 그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협의체다. 5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도 그 일원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방공 시스템의 추가 지원 문제가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핵 전쟁과 재래식 전쟁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같은 블랙 코미디가 아니다.(나토 국방장관 회의장



미 공군 B-52 폭격기가 이끄는 나토군의 발트해 상공 편대비행

은 스탠리 쿠브릭 감독의 <닥터 스트레인지러브>에 나오는 미국 국가안보회의 장소와 모양새가 비슷하다.)

위험한 확전으로 향하게 될 조치들을 의논하는 회의였다.

10월 17일 나토가 14개국이 참가하는 핵억지 훈련인 ‘스테드패스트 눈’을 시작했다.

이달 말 러시아도 대규모 핵전쟁 훈련인 ‘그룹’을 실시한다.

재래식 전쟁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토와 러시아가 핵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싱크 탱크인 독일 마샬 펀드의 부대표 이언 레서는 이렇게 말했다.

“나토와 러시아의 재래식 충돌이 고의적으로, 더 개연성이 있기로는 군사 작전 중에 우연히 벌어질 위험이 크다.

그러면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레서는 그런 불뚱이 될 마찰 지역이 꼭 우크라이나 영토나 그 주변국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폴란드 국경일 수도 있고, 발트해 연안일 수도 있고, 흑해 연안일 수도 있다. 심지어 지중해, 시리아, 리비아, 사헬 지역(사하라 남부)일 수도 있다.”

서방과 러시아 간의 제국주의적 경쟁이 낳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구 곳곳에서 또 다른 충돌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와 협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가 요구하는 대공 무기 체계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전 초부터 소위 ‘비살상’ 군수품을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폴란드에 무기를 대량 수

출함으로써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간접적으로 보강해 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과 장기화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좌파는 평화 운동을 건설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등 나토 측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좌파는 특히 나토의 무모한 확전 노력을 좌절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김인식

함께 참가합니다!

우크라이나에평화를! 전쟁을멈춰라!

공동행동

11월 26일[토] 서울 도심

[구체적 장소와 시간 추후 공지]

징집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 입국 막은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과 러시아 모두 이에 아랑곳 않고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더 확대하려 한다. 심지어 핵전쟁으로 치달을 위험도 감수하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서방의 무기 지원에 힘입은 우크라이나의 공세로 전황이 불리해지자, 푸틴은 지난달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내렸다.

그러자 징집을 거부하고 카자흐스탄, 핀란드, 조지아 등 국경을 넘어 달아나는 러시아인들이 늘고 있다. 그 규모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 일부가 한국으로도 오고 있다. 지난 10월 1일부터 9일 사이에 총 5척의 러시아발 요트가 포항과 속초 등에 입국을 시도했다. 요트들에는 모두 합쳐 26명의 러시아인들이 타고 있었다.(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들 중 단 6명만 입국을 허가했다. 나머지는 입국 목

적이 불분명해서 불허했다고 말했다. 10월 12일 법무부장관 한동훈은 이와 관련해 “통상의 출입국시스템에 따른 조치이고, 앞으로도 원칙대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KBS가 입수해 보도한 해양경찰의 당시 상황 보고서에는 징집 회피 목적의 입국 시도가 의심돼 이들의 입국을 불허한다고 기록돼 있었다. 입국이 허가된 사람들은 40~50대로 징집 대상보다 연령이 높다고 한다.

이런 문전박대는 불의한 전쟁에서 총

알받이로 헛되이 목숨을 잃지 않으려는 러시아 청년들의 절박함을 외면한 냉혹한 짓이다. 한국 정부는 얼마 전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해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했다. 이들이 징집을 피하지 못하면 바로 그 무기들에 희생될 수 있는데 말이다.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운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을 편들어 왔다. 윤석열은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국제 연대로 자유를 지켜야” 한다

▶ 7면으로 이어짐

지속되는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란의 시위가 극심한 국가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돼 5주 차에 접어들었다. 조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여러 석유 화학 공장의 일부 노동자들이 지난주 도로를 봉쇄하고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며 파업을 시작했다.

이 파업은 반정부 투쟁 물결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히잡 강제 착용 반대로 시작한 시위는 (여전히 여성 해방을 위한 투쟁이라는 성격을 핵심으로 간직한 채) 순식간에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

거리에 나온 사람의 다수는 가혹하고 억압적인 법을 증오할 뿐 아니라 빈곤과 실업이라는 미래를 앞둔 청년·학생들이다. 이란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실업과 긴축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다.

테헤란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인 샤리프 아모즈가르(가명)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석유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은 단순히 경제적 요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재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거리 시위대와]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기에 거리 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021년 여름에도 석유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전국적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그 규모와 위력 면에서 전례가 없었습니다.”

샤리프는 파업이 얼마나 확산될 수



테헤란에서 대치 중인 이란 보안군과 시위대

있을지를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석유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은 주로 임시 계약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요 유전에서 일하는 핵심 인력이 아니라, 유전을 보수·개발하는 부수적인 일을 합니다. 따라서 아직은 1979년 혁명 당시 노동자 파업처럼 정부의 석유 생산을 무력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파업이 실제로 발전한다면, 이는 운동에 필요한 힘을 보탬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이 시위대에 소름 끼치는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들이 있다.

지난주 수도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내부에서 총성이 들렸다. 에빈 교도소는 정치범들이 수감된 곳이다. 테헤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로아는 〈소셜리스트 워커〉에게 이렇게 전했다. “에빈 교도소에는 지식인, 대학생, 여성, 정치 활동가들이 많이 수감돼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반란이 일어난 건지, 국가가 교도소 내 시위자들을 진압하려고 있는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건으로 에빈 교도소에 가족이 수감돼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여전히 교도소 내부에서 총성이 들린다고 합니다.”

로아는 경찰 폭력의 증거가 나오면서 여전히 거리에 있는 시위대가 새로운 요구를 내걸게 됐다고 전했지만, 탄압으로 인해 일부는 시위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방방곡곡에서 시위와 저항이 벌어지고 있지만, 혁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여러 학교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국가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삶에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와 불안を 불어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약 이틀 전, 국가는 이란 북서부 아르다빌의 한 여학교를 습격해 많은 학생을 체포하고 한 명을 살해했습니다. 저와 알고 지내는 여러 가족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샤리프는 일부 “개혁파” 정치인들이 정부에 운동을 가라앉히려려면 양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가혹한 탄압이 이어졌다”고 한다.

“정부가 완전히 전복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해야 한다는 정서가 팽배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탄압에 직면해 이런 정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폭력이 극심하지만, 며칠 후 시위가 또다시 일어나고 더 커지는 것을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닉 클라크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27호 번역 김동욱

▶ 6면에서 이어짐

고 연설했다. 그런데 정작 푸틴의 억압으로 고통받는 러시아 청년들은 그 국제 연대의 대상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연대해야 할 대상은 서방 제국주의 강대국의 지배자들이 아니라 러시아의 평범한 대중이다.

푸틴이 동원령을 내리자 러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징집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징집을 피해 탈출한 러시아인들도 이런 저항의 일부다.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평범한 러시아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확전을 낳을 한국 정부의 전쟁 노력에 반대하는 것이 러시아인들의 저항에 연대하는 방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경 통제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보여 준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했다. 한국에 사증 없이 입국 가능한 112개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온라인으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게 하는 제

도다. 정부가 입국을 원치 않는 사람을 사전에 막으려는 것이다.

이번에 입국이 거부된 러시아인들은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하고 러시아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징집을 피해 한국에 오는 러시아인들의 입국을 허용하고, 그들이 원하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귀국을 원치 않는 한국 거주 러시아인들에게도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

임준형

100년 전인 1922년 10월 28일 ‘로마 진군’으로 베니토 무솔리니가 집권했다. 그러나 실제로 ‘진군’한 것은 아니었다. 파시스트 대부분은 제때 로마에 도착하지 못했고, 도착한 자들도 폭우에 쫓딱 젖어 궤궤한 몰골로 비척거렸다. 파시스트 무장 집단들은 크레모나와 피사에서 참패를 겪었다.

피렌체에서 파시스트들은 습격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탈리아 공군 최고 지휘관 아르만도 디아스가 건물 안에서 무솔리니 지지 연회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습격은 정부군도 참가하는 열병식으로 황급히 대체됐다.

로마에서 이탈리아 국왕은 응전을 허가했다. 그에 따라 철도가 차단되고 도로가 봉쇄됐다. 그러나 국왕이 계엄령 선포를 거부하자 총리가 사임했다. 1만 2000명 병력이 로마를 지키고 있었지만 이들은 무력을 쓰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국왕은 한 우익 정치인에게 정부 구성을 요청했지만, 무솔리니가 그 정부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자 국왕은 무솔리니를 총리로 지명했다.

쿠데타는 모두가 뻔히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진행됐다. 따지고 보면, 수도 로마로 “진군”한 것은 무솔리니를 태우고 밀라노에서 출발한 침대 열차 뿐이었다.

쿠데타가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1919~1920년 ‘붉은 2년’ 동안 벌어진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 운동에 기업주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붉은 2년’ 당시 이탈리아의 기업주들이 어찌나 혼비백산했는지, 자동차 기업 피아트와 사장은 자기 공장을 노동자들에게 넘기겠다고 제안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탈리아 좌파는 이를 성공적인 혁명으로 발전시키지 못했고 이는 재앙적인 결과를 낳았다. 역사가 존 푼트는 무솔리니가 이탈리아 안팎의 100만 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추산한다.

그보다 몇 년 전 벌어진 제1차세계대전은 이탈리아에 재앙을 몰고 왔다. 하지만 이때 맹렬한 산업 발전이 시작되기도 했다. 전쟁이 끝날 때쯤 이탈리아의 금속 노동자 수는 50만 명에 달했고, 노동조합원 수는 300만 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물가 상승 때문에 생활 수준이 열악해졌고 식량 부족이 심각했다.

이에 대응해 노동계급의 전투성이 분출해 정치 질서를 산산조각 냈다.

이탈리아 북부의 산업 자본가들은 자유당을 자신들의 당으로 여겼다. 가톨릭 정당 연합은 더 오래된 지배계급



조르자 멜로니의 이탈리아 총리 등장을 계기로 무솔리니의 집권을 돌아보다

사이먼 바스케터

인 지주들을 대변했다. 가장 막강했던 정치인 조반니 졸리티는 그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득을 봤다.

졸리티는 이탈리아 사회당(PSI) 지도부와 주요 노동조합 연맹인 이탈리아 노총(CGL)을 포섭하는 데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무솔리니는 제1차세계대전을 지지한 것 때문에 사회당에서 제명됐다. 무솔리니는 조선업 기업주들과 영국 철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파시스트 이데올로기를 발전시킬 새 신문을 창간했다.

1919년 4월 파시스트가 조직한 폭력배가 최초의 공격을 감행했다. 사회당 기관지 <전진>의 밀라노 사무실에 불을 질렀고, 네 명이 목숨을 잃었다.

1919년 9월 이탈리아군은 베르사유조약에 따라 아드리아해 북부 항구 도시 피우메에서 철수했다. 민족주의 시인 가브리엘레 단눈치오가 여기에 항명하는 병사 2000명과 함께 피우메시를 점거했다.

정부는 이들과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대처했고, 이는 부상하던 파시스트들에게 순풍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기업주들은 파시스트를 집권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이탈리아 파시즘을 연구한 한 역사가는 이렇게 지적했다. “부유층이 수세에 몰려 있는 동안, 파시즘은 대단찮은 성공조차 거두지 못했다.” 1920년 9월, 금속 노동자들의 사용자들은 파업에 직장폐쇄로 대응했고, 이에 노동

이탈리아 좌파는 ‘붉은 2년’을 혁명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지배계급은 이제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들이
거느린 깡패에 기대를 걸었다

자 50만 명이 공장을 점거하고 노동자 통제를 선포했다. 총선에서 사회당은 156석을 얻어 최대 단일 정당으로 부상했다.

토리노에서 노동자들의 점거는 이중 권력의 요소를 품고 있었다. 노동계급 권력이 공식 정부의 권력에 맞섰고, 무장한 노동자들이 공장을 방어했다.

밀라노에서 열린 [노총 지도자들과 사회당 지도자들의] 공동 회의에서 노총 지도자들은 사회당 지도자들에게 혁명을 일으키러 나서 주면 자신들의 권한을 넘겨 주겠다고 제안했다. 사회당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대신 정부는 산업을 통제할 노사 공동위원회 설립을 약속하는 합의를 맺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동조합은 공장 점거를 끝냈다.

한편, 농민들은 토지를 점거했고 농업 부문 일용직 노동자들은 전투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해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

지주들은 정부가 자신들을 지켜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산업 자본가들은 노동자 통제라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태세가 돼 있었다. 이제 두 집단 모두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이 거느린 무장한 깡패에 기대를 걸었다. 그 결과, 부자들의 돈이 무솔리니에게 흘러갔다.

1920년 겨울에서 1921년 봄에 이르는 시기가 결정적이었다. 파시스트 무장 집단들은 사회당 지지자들을 상대로 체계적인 폭력 테러를 자행했다.

파시스트들이 군부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도 중요했다. 참모총장은 6만 명에 이르는 제대 장교들을 파시스트 무장 집단에 가입시키라고 지시했다.

경기가 둔화하자 고용주들은 공세에 나섰다. 1921년 1월에는 실업자가 60만 명에 이르렀다. 고용주들은 정부가 감세와 보조금으로 자신들을 구제해 줘야 한다고 아우성쳤다.

무솔리니는 사장들의 요구 일체를 자신의 것으로 차용해, 사회당과 노총을

▶ 9면으로 이어짐



1922년 '로마 진군'을 벌이는 무솔리니와 그 지지자들. 로마 진군은 엉망진창이었지만, 좌파들의 무능 덕에 파시스트들은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

▶ 8면에서 이어짐

포섭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배계급의 불만을 모아 내는 데 주력했다.

주류 우파 역시 파시스트들을 포섭하려 했다. 파시스트를 의회 정치로 길들일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다.

1921년 봄 졸리티는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공표해 “국민연합”의 후보로 출마했는데, 이 선거 연합에는 무솔리니도 포함돼 있었다. 선거 결과 파시스트 30명이 의원으로 선출됐다.

1922년 초에 이르면 수천을 헤아리는 파시스트 대열이 농촌 지역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었다. 1922년 8월에 파시스트들은 밀라노와 리보르노의 시청을 점거할 만큼 자신감이 높았다. 두 도시의 시의회 모두 사회당이 주도했다.

파시스트들은 제노바의 항구를 점거하고는 노조를 분쇄하고 좌파 신문사 건물을 불태웠다. 이탈리아 지배계급 일부가 확실히 파시스트들의 편으로 돌아섰다. 아나키스트 역사가 다니엘 게랭이 10월 28일 사건에 대해 쓴 대로, “무솔리니와 제조업자총연맹 지도자들 사이에 매우 열띤 회의가 몇 차례 열렸다.

“로마 진군에 돈을 낸 은행협회 대표들, 제조업연맹 지도자들, 농업연맹 지도자들은 정부에 전보를 쳐서 유일한 해결책은 무솔리니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교황 역시 무솔리니를 분명하게 지지했다. 사회당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파시스트들의 위협에 맞선 행동을 조직하기를 거부했다. 1921년 3월 사

회당 지도자 지코모 마테오티는 이렇게 권고했다. “집에 계십시오. 도발에 대응하지 마십시오. 침묵도, 비겁함도 때로는 영웅적인 것입니다.”

사회당과 노총의 지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좌파 성원들과 전직 군인들이 반(反)파시즘 전투 부대 ‘아르디티 델 포폴로[인민의 돌격대]’를 창설했다. 이들은 때로 승리를 거두도 했는데, 예컨대 1922년 8월 파르마에서 대중적 맞불 행동을 조직해 무솔리니의 검은셔츠단 수천 명을 물러서게 했다.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1921년 8월] 사회당은 무솔리니와 양측 모두 무장 해제를 약속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정부 당국은 이를 노동자 조직들을 단속하는 근거로 이용했다. 1922년 2월 노총은 여러 노동조합을 모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연합을 꾸렸다. 7월 31일 이 연합은 바로 다음 날 총파업을 소명했다가 곧장 이를 취소했다.

그러고 나서 노총은 무솔리니를 상대로 협상에 나섰는데, 로마 진군이 벌어질 즈음 노총은 무솔리니의 입각 제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다.

1921년 1월, 사회당에서 분열해 나온 사람들이 4만 명 규모의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당했다. 공산당에서 주도권을 잡은 인물이었던 아마데오 보르디가는 사회당과의 협력 일체를 원칙적으로 거부했다.

보르디가는 지배계급의 정당들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타협이 이뤄질 것이



1922년 8월 잠시나마 파시스트들을 막아낸 파르마의 노동자들. 그러나 사회당은 이런 움직임을 만류했고 공산당은 협력을 거부했다

라고 하면서 파시즘의 권력 장악 가능성을 일축했다. 보르디가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파시즘의 특수한 위험성을 부정하고 파시즘을 또 다른 형태의 부르주아 지배라고 봤기 때문이었다.

[총리에 지명될] 당시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은 35석의 의석을 보유한 의회 내 소수파였다. 무솔리니가 독재를 수립하려면 자기 동맹들을 약화시켜야 했다. 무솔리니는 조세에 대한 전권과, 사법부·군대·학교 등 국가 기구를 개편할 전권을 장악했다. 1922년 12월 무솔리니는 공산당원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1924년에는 사회당의 마테오티를 살해했다. 이에 대한 반발은 무솔리니 정부를 위협했다.

자생적 시위들이 분출했다. 하지만

사회당은 기회를 허비했다. 사회당이 한 일이라고는 의회에서 퇴장하는 것뿐이었다. 무솔리니는 사회당을 이렇게 비웃었다. “사회당이 총파업이나 하다못해 부분 파업이라도 선포하고 있나? 거리 시위를 조직하고 있나? 군대 내 반란을 선동하고 있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파시스트 무장 집단은 이어서 자유당을 맹렬히 공격했고, 자유당 기관지를 인쇄하는 윤전기를 박살 냈다. 1925년 10월 사회당은 불법화됐고, 뒤이어 모든 야당이 불법화됐다. 로마 진군은 엉망진창이었지만, 결국 파시스트가 승리한 것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27호 / 번역 김준호

한·미·일 훈련과 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가 미·중 간 힘 대결의 또 다른 장이 되다

김영익

한·미·일 그리고 한·미의 대규모 연합훈련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포 사격 등이 교차하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꽤 고조되었다.

북한은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쏘는 등 향상된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다.

북한 정부 스스로 밝혔듯이, 이런 행동에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성격이 있다. 또한 대북 선제 타격 등 3축 체계 강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한·미·일은 동해에서 대잠수함 훈련과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함께 진행했다. 이런 일련의 연합훈련은 비단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다.

동해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벌이는 곳이며,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물밑에서 잠수함 추격전을 치열하게 벌이는 곳이 돼 가고 있다.

또한 동해는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이며, 중국 군함이 두 달에 한 번꼴로 대한해협을 거쳐 진입하는 요충지다.

이런 곳에서 벌이는 한·미·일 연합훈련과 군사 협력 강화가 누구를 겨냥한 행동인지는 뻔하다. 이 연합훈련이 당연히 북한도 자극했다.

이에 더해 미군은 10월 17일부터 시작된 한국군의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한·미 군당국은 10월 31일부터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군용기 250대가 투입된 대규모 공중 연합훈련도 벌일 예정이다.

북한이 남북 접경지 인근에서 전투기들을 전개하고 있던 포 사격을 벌이는 까닭이다.

이처럼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 문제는 미·중 갈등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불안정 증대와 깊이 연관돼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불안정을 더 자극하고 있다.

경쟁

10월 12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새 국가안보전략을 공개하며, 중국을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이를 위한 힘을 지닌 “유일한 경쟁자”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를 억제

하는 것”을 핵심 안보 목표로 설정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힘을 약화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공개 선언이었다.

미국의 이런 전략(과 중국의 단호한 대응 천명)이 대만 정책에 반영돼, 지난여름 미국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과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으로 대만해협에 커다란 긴장이 촉발됐었다.

긴장의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9월 미 상원 외교위에서 대만정책법안이 통과돼 상·하원 표결 절차로 넘어갔는데, 이 법안은 대만을 한국·이스라엘·일본 등 비나토 동맹국 수준으로 대우한다고 돼 있다. 중국 정부는 이 법 제정이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10월 16일 시진핑은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대만과의 통일 의지를 밝히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은 또한 핵 운반 수단의 확장과 탄두 숫자의 증강 등 핵무력을 강화할 것임도 밝혔다.

바이든 정부도 국가안보전략에서 핵무기 현대화 노력을 지속하는 중이라고 했다. 미국외교협회 회장 리처드 하스는 최근 기고문에서 지금이 “핵무기가 확대되고 그 무기가 지정학에서 더 두드러진 구실을 하는 시대로 가는 전환점”일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 시대의 도래를 더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대만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군비 증강과 미일동맹 강화를 추진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다. 일본 정부는 5조 엔(한화 51조 원) 수준의 방위예산을 점차 늘려, 2027년에는 갑절인 10조 엔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게 현실화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군비 증강이다.

이처럼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경쟁과 군국주의가 강화되면서, 이런 흐름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도 이런 주변 흐름에 걸맞게 대응하려 한다. 9월 1일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보유하려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의 첫 번째 타격 대상이 중국과 북한이라며,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확보 계획을 비난했다.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경쟁으로 동아시아 불안정이 증대하면서, 한반도에 점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동해에서 열린 한·미·일 연합훈련. 한반도 주변에서 강대국들의 무력시위가 교차하며 긴장이 증대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해법 — 우파, 민주당, 좌파

최근 정부·여당에서는 호전적인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특히 여당 내에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등 온갖 우익적 주장이 튀어나오고 있다.

정진석 여당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한반도비핵화선언도 파기해야 한다며,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말했다. 한국에도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정부는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군사적 실익은 별로 없는 데 반

해, 리스크는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다.

미국 내에서는, 핵무기 배치가 추진되면 한국 내에서 정치적 갈등과 반미 정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미국은 확장 역제의 이름으로 전략 폭격기 등 전략 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자주 전개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이미 지금 그러고 있다.

국내 우파들의 호전적인 발언들은 핵배치가 안 되더라도 미국에게서 더



10월 10일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모습

많은 안보 약속을 받아내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그조차 동아시아 핵무력 경쟁의 악순환을 자극할 수 있다. 우파는 내심 일본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만이라도 보유하기를 원한다.

3자 협력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군국주의와 더불어,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는 한반도를 미·중 갈등에 더 깊이 연루시키게 될 것이다.

물론 한국이 중국과 여전히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쉽지 않은 선택들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해에서 벌어진 잇단 한·미·일 연합훈련은 국내에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한국을 “한·미·일과 북·중·러 군사 동맹체들의 전초기지”로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미·일 연합훈련은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고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당 대표의 이런 옳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이런 견해에는 모순과 위선이 숨어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그들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한·일 협력 강화는 바로 미국이 지지하는 지향성이다. 10월 17일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한 대답 행사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주는 이점의 하나로 “한국과 일본을 더욱 가깝게 하는 것”을 꼽았다.

민주당이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한, 한·미·일 동맹 문제에서도 미답지 않은 세력이다. 문재인 정부도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시키고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했었다.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의 불안정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은 정부·여당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주장 등을 비판하며, “남북 군사적 투명성과 상호 위기 예방을 위한 군비 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미·일 군사 협력에 반대하는 〈민중의소리〉도 북한에 대한 윤석열의 ‘강대강’식 태도를 비판한다. 그러나 “평화적 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문재인 정부를 따라 “대화와 협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만 문제에 한국이 연루될 위험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주권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 유사시 주한미군이 함부로 대만 본토에 투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정육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과 길윤형 한겨레 국제부장 등이 공저한 《미중 경쟁과 대만해협 위기》).

다수 급진좌파도 한반도 평화협정을 제국주의 질서에 맞서는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처럼, 다수 좌파는 모두 군국주의와 한미(일) 동맹 강화를 비판하고 나름의 평화적 해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국가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것보다 대화와 협상이 계급투쟁을

지금 “핵무기가 확대되고 그 무기가 지정학에서 더 두드러진 구실을 하는 시대로 가는 전환점”일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를 더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경쟁과 군국주의가 강화되면서, 이런 흐름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함한 사회운동이 전개되기에 좀 더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반도 문제 등(그뿐 아니라 모든 분쟁 지역 문제)을 다룬 협상과 합의의 경험을 돌아보면, 국가 간 평화 합의로 일시 긴장이 완화되더라도 이것이 결국 새롭게 긴장이 악화되고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방지해 주지는 못했다.

제국주의 질서와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경쟁이 온존하는 한 현존 질서 안에서 마련되는 어떤 합의나 제도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제국주의 질서 자체를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제국주의 질서에 일관되게 맞서려면, 그것의 토대인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반대하고 대적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 제국주의에 (비판적) 지지 입장을 가지는 것도 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일관된 반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우리는 지금 미·중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적 대결과 투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이 대결이 머지않은 미래에 대만해협뿐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충돌과 심지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또, 경쟁하는 열강 중 어느 한쪽도 지지하지 않으면서 그래야 한다.

바이든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냉전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다

우크라이나 곳곳에 미사일이 떨어지던 지난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냉전기 정치로의 회귀를 선포했다.

바이든은 세계가 “변곡점”에 있다면서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제 바이든은 “국제 질서의 미래를 결정짓고” 경쟁국들을 “압도”하려 한다.

그 48페이지짜리 보고서는 이렇게 밝혔다. “2020년대는 미국 대 중국의 경쟁이 어떤 형세에서 벌어질지를 결정하고 러시아가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결정적일 것이다.”

그러려면 자원을 군비로 대거 돌려야 하고 중국을 핵심 경쟁자로 인식해야 함을 바이든은 분명히 했다. 그리고 핵전쟁 가능성을 언제나 염두에 두겠다고 한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유일하게 국제 질서 재편 의도를 갖고, 그걸 경제적·외교적·군사적·기술적 역량을 갖춰 가고 있는 경쟁자”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핵 억지력은 미국에게 여전히 최우선 사안이다.

“2030년대가 되면 미국은 처음으로 두 개의 핵무장 강대국들을 억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핵 억지력을 미국이 직면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3대 핵 전략 자산, 핵 지휘·통제·통신, 핵무기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다시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힌다. “각국은 왜 미국에 맞서 판돈을 걸지 말아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고 있다.” 이 보고서가 2018년 트럼프 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나오는 표현들을 되풀이하는 것에 주류 논평가들조차 놀랐다.

바이든의 정책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전쟁이 민주주의나 제국주의 침공에 맞선 약소 민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미국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국의 경제적·군사적 지배를 위한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힘을 억지·약화하는 수단이다.

이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점에 군사동맹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군대와 군수산업을 재건하고 나토 지휘 체계에 완전 통합하는 10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와의 완전한 상호운용성을 갖추게 할 방위 계획 요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나토 고위 인사는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공식 요청이 부결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나토 회원국이 되게 할 것이다.

이는 미국에게 막대한 전략적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악화일로로 치닫게 하고 그 일대로 확전시킬 가능성을 키울 뿐이다. 러시아를 나토 국가와 나토와 공조하는 국가들로 포위하는 것은 위협 수위를 높이고, 핵무기가 동원되는 충돌의 가능성을 더 높인다.

그러나 현재로서 서방은 기꺼이 막대한 무기를 쏟아붓고 갈등을 무기한 연장시키려는 듯 보인다. 지난주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 관료들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러시아와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선택은 배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 자신이 이 전쟁에서 어느 쪽도 “뚜렷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믿고, 바이든이 지난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겟돈”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도 말이다.



나토 군사 훈련에 등장한 RBS 70 대공 방어 체계. 미사일 방어막은 더한층의 파괴를 부를 뿐이다

미사일 방패로 우크라이나인들을 지킬 수 없는 이유

지난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키이우) 등 여러 대도시를 공격했다. 이에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방패를 지원해야 한다는 요청이 다시 제기됐다.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독일에서 지원한 신허 열추적미사일의 1차 수송분이 10월 11일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

지난주 프랑스·네덜란드·스페인인은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은 수도 워싱턴 DC 인근에서 사용 중인 것과 같은 종류의 미사일 발사대 2기의 수송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제공권 확보” 노력은 민간인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첨예하게 만들 뿐이다.

우크라이나 수도와 그 밖의 러시아의 잠재적 표적들 주변에 “방어막”을 치면 러시아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미사일을 쏠 것이다. 러시아의 전략 수립자들은 온갖 무기를 감당 못할 정도로 퍼부어 방어막에 과부하가 걸리게 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군은 방어막이 갖춰지지 않은 우크라이나 국토의 더 많은 지역으로 공격을 돌릴 것이다. 러시아군은 미사일 포대가 있는 군사 시설이 아니라 방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민간인 거주 구역을 지금보다도 더 노릴 것이다.

서방의 미사일 요격 기술 도입에 대응해 러시아는 훨씬 위험한 전략에 손을 댈 것이다. 예컨대 전술 핵무기를 동원하거나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탄도 미사일은 미사일 방패로 격추하기에는 비행 속도가 너무 빠르고 고도가 높다. 폭발력이 더 치명적인 미사일들이 우크라

이나를 타격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방은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를 거둬 요청해 왔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과 초음속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다. 사거리가 길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이나 고도가 높은 표적도 타격할 수 있다.

서방이 젤렌스키의 요청에 응한다면, 이는 이제껏 심지어 미국 군 당국자들조차 거부해 왔던 심각한 확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미사일 방어막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폭탄으로부터 전혀 지키지 못하며,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더 치명적인 무기의 표적이 되도록 할 뿐이다.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27호 / 번역 김준호



서평 | 《섹스할 권리》 아미아 스리니바산 | 창비 | 22,000원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의 약점을 고찰한 책

“섹스가 진정 자유로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물음에 천착해 오늘날 섹스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페미니즘 내부의 문제점을 다룬 책이 나왔다.

《섹스할 권리》의 저자인 인도 출신의 철학자이자 페미니스트 아미아 스리니바산은 성별 이분법에 비판적이고 교차 페미니즘을 지향한다. 미국의 흑인·여성 해방운동의 투사인 앤절라 데이비스를 지지하며 《여성, 인종, 계급》 등 그의 책 구절을 수차례 인용했다.

《섹스할 권리》는 섹스를 개인의 자유 거래로만 보는 성적 자유주의와 남성의 지배 행위로 보는 안티섹스 페미니즘 모두에 반대한다. 전자는 구조적인 사회 문제를 기각하고, 후자는 남성 배제에만 골몰하며 성적 보수주의로 흐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섹스와 성적 관계를 굴절시키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문제에 주목하며, 국가 권력을 이용한 차별 강화 정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도 남녀 대립적 페미니즘이 비슷한 문제점을 보여 온 상황에서 이 책은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미투 운동의 구호 돌아보기

《섹스할 권리》는 총 여섯 개의 에세이로 구성돼 있는데, 그 중 ‘누가 남성을 음해하는가’, ‘포르노를 말한다’, ‘섹스, 투옥주의, 자본주의’ 이 세 글이 특히 흥미롭고 유익하다.

‘누가 남성을 음해하는가’에서는 미투 운동에서 주류 페미니스트들이 사용한 구호 ‘여성을 믿자’(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에 담긴 약점을 고찰한다.

저자는 이 구호의 취지가 “여성 차별적이고 편파적인 법제도”에 맞서는 데 있다는 점에는 공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구호에 담긴 논리, 즉 여성은 “진실을 말하고” 남성은 “거짓을 말한다”는 것에는 비판적 태도를 취한다.

드물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여성의 허위 고소 때문에 무고한 남성이 범죄자로 몰려 “인생이 황폐해지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저자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

성폭력 허위 고소와 자백 강요가 인종차별 유지·강화에 이용된다는 점도 잘 보여 준다. 가령, 미국에서 짐 크로법(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인종차별법)



백인 여성을 강간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 등 중형을 받았던 흑인 남성 4명을 기리는 기념비(2020)

이 시행되던 시기에는 백인 여성의 허위 강간 진술로 수많은 흑인 남성들이 린치를 당하고 살해당했다.

오늘날 양상은 달라졌지만, 허위 고소는 여전히 국가나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흑인 등 유색인을 억압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1989년~2020년 동안 미국에서 허위 고소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52퍼센트가 흑인 남성이었다. 흑인 남성은 미국 남성의 고작 14퍼센트를 차지하는 데도 말이다.

부자 남성들은 허위 고소를 당하든 진짜 성범죄를 저지르든 비싼 변호사를 고용해 형량을 대폭 줄이거나 빠져나갈 수 있지만, 흑인 등 가난한 유색인은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반문한다. “가난한 사람과 유색인에게 제도적으로 불리한 감금을 목적으로 하는 접근법이 과연 성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 책에는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며 처벌 강화로 치닫는 정치가 사회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혼란과 모순을 낳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가 많이 나온다.

가령 2014년 캘리포니아에서 페미니즘 운동가들의 지원을 받아 통과된 캠퍼스 성폭력 방지법안은 성행위에서 합의 여부 판단 기준으로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긍정적 합의가 “성행위 내내 계속 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과도한 규정으로 명백한 동의 없음과 거절 사이에 존재하는 회색지대의

성관계나 여성이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러웠던 성행위 등도 모두 ‘강간’으로 규정될 수 있었다. 어떤 학생들(주로 가난하고 유색인 남학생들)은 법적으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학교에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배척당하는 일을 당했다.

처벌 강화 정치의 모순

이 책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처벌 강화를 추구하는 페미니즘 운동이 성적 보수주의 강화로 귀결되는 것도 날카롭게 들춰낸다.

1970년대에 미국의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를 여성 억압의 원인으로 규정했다. 즉,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이라는 것이다.

캐서린 맥किन과 안드레아 드워킨은 1980년대에 국가에 포르노 규제를 촉구하며 기독교 우파와도 손을 잡았다. 이런 운동의 결과, 성범죄가 아니라 성적 자유가 옥죄게 됐다. 1992년 캐나다 대법원은 매किन과 드워킨의 입장을 이용해 포르노를 범죄화했는데, 그 후 경찰은 캐나다 최초의 게이·레즈비언 서점을 공격해 레즈비언 잡지를 몰수했다.

2014년에도 영국은 ‘나쁜’ 포르노를 단속하기 위해 특정 성행위 금지 목록을 만들어 검열을 강화했다.

저자는 성매매 불법화 운동도 성매매 여성을 궁지로 내몰았을 뿐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성매매 여성의 안전을 위해 성매매를 비범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성을 사고 팔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일로 나



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은 매우 타당하다. 포르노와 성매매는 자본주의 여성 차별과 성적 소외의 산물이지 그 원인이 아니고, 포르노·성매매 반대 운동은 우파나 지배계급 전체에 이용되기 쉽다.

저자는 국가 권력의 처벌 강화에 집중하는 페미니즘 활동은 진정한 성적 자유와 여성 차별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단언한다.

“페미니스트들이 (경찰들이 거리를 순찰하고 남성들을 감옥에 보내는) 투옥 해결책을 받아들일 때 이는 지배계급이 범죄 대부분의 가장 심각한 원인 되는 빈곤과 인종 지배, 국경, 계급 제도 같은 문제의 해결을 거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1994년에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여성 폭력 범죄를 단속하는 예산을 늘렸지만, 여성들에게 절실한 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이는 가난한 여성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다.

저자는 여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불평등과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과 의료 서비스, 교육과 보육의 사회화,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하며 노동운동과 여성운동,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함께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긴축과 복지 삭감으로 여성의 처지가 악화되는 것에 맞서려면 광범한 대중투쟁이 필요하므로, 이런 연대를 강조하는 것은 단연 이 책의 장점이다.

그러나 이 책은 계급 차별을 여러 차별의 하나로만 볼 뿐,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적 사회관계로 보지 않는 교차 페미니즘의 약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페미니즘 운동 내의 도덕주의와 엄벌주의에 대한 저자의 날카로운 비판은 진지하게 곱씹어 볼 가치가 있다.

전주현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workerssolidarity.org

문의: 02-2271-2395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일하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토크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당시증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새 코너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기후 정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과 핵발전 등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와 운동 내 쟁점을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인크로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4 4



사진 출처: 화성시노동조합(SPL)

동료가 죽은 사고 현장을 흰 천으로 덮은 채 계속 샌드위치를 만들어야 했던 노동자들

파리바게뜨 노동자 산재 사망 탐욕 외에도 냉혹한 이윤 시스템 탓

또 한 명의 23세 청년이 일하던 중 끔찍한 사고로 숨졌다. 제빵 공장에서 300킬로그램의 재료를 부어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회전하는 기계 입구에 상반신이 빨려 들어갔다.

고인은 사회 초년생인 여성으로,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그렇게 홀로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한 가장이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망 사고는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등 40여 개 브랜드와 5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대형 식품기업 SPL그룹(의 한 계열사 SPL)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매출이 3조 원 가까이 되는 이 대기업에서 노동자들은 안전장치도 없이 홀로 위험 작업에 투입됐다. 사람보다 기업의 수익성을 우선하는 냉혈한 이윤 논리가 소중한 목숨을 앗아 간 것이다.

고인이 사고를 당한 소스 혼합기(회전기)에는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지만, 해당 기계에는 그것이 없었다.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생산 속도가 낮아져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측이 꺼린 탓이다.

동료 노동자들에 따르면, 2인 1조 근무 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비용 부담을 걱정한 사용자 측이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SPL 평택 공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제빵 공장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조건과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노동자들은 1일 2교대로 하루 12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고인이 생전에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는 고된 노동에 대한 한숨이 깊이 묻어났다.

반복되는 비극

게다가 비슷한 사고가 고인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도 있었다. 같은 공장에서 한 계약직 노동자가 기계에 손이 끼이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사측 관리자는 안전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병원에 보내 달라는 당연한 요청마저 매몰차게 거부했다고 한다.

심지어 사용자 측은 이번 사망 사고 바로 다음 날 동료의 죽음을 지켜본 노동자들을 바로 그 현장 옆에서 일하게 했다. 사고 현장을 흰 천막으로 가려 둔 채 말이다.

사용자 측의 이런 천인공노할 조치들을 보면, '우리에게 일하는 손이 필요하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어느 자본가의 말이 떠오른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SPL 사용자 측에 분노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피 묻는 빵은 먹지 않겠다"며 대학가와 온라인상에선 불매 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비판이 확대되자 SPL그룹 측은 "안전 경영"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런데 SPL 사용자 측은 지난해 던킨도너츠의 위생 관리 문제, 계열사 곳곳에서 연이은 노조 탄압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위생·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ESG 경영(친환경 사회적 공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이번에 또 다시 비극을 낳았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생을 달리한 고 김용균 씨(당시 24세)를 떠올리게 한다. 그 뒤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됐지만 산재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SPL에서 고인이 사망한 날, 거제 대우조선에서도 한 하청 노동자가 지게차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그 전날에는 한국화이바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추락사했고, 또 그 전날에는 김해의 한 사업장에서 산소 절단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졌다.

자본주의 이윤(경쟁) 논리 앞에서 노동자들의 목숨은 하찮게 여겨지고 있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쳐버린 체제의 우선순위에 도전해야 한다.

신정환

관련 온라인 기사: 기업주 부담 덜어 주려 알량한 중대재해처벌법마저 후퇴 시도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허용에 위헌 판결 내려야

임준형

10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제청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는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에는 재판관 9명 중 4명, 2018년에는 5명이 위헌 의견을 내어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공개 변론이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추방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미등록 이주민을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금에 기한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출국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출국을 거부하는 경우 장기 구금되는 일이 벌어진다. 무려 4년 8개월 동안 구금된 이주민도 있었다.

체불 임금이나 소송 등 한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거나, 한국에 오래 거주해 본국에 생활 기반이 전혀 없는 등 그 사유도 다양하다. 특히,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난민들이 장기 구금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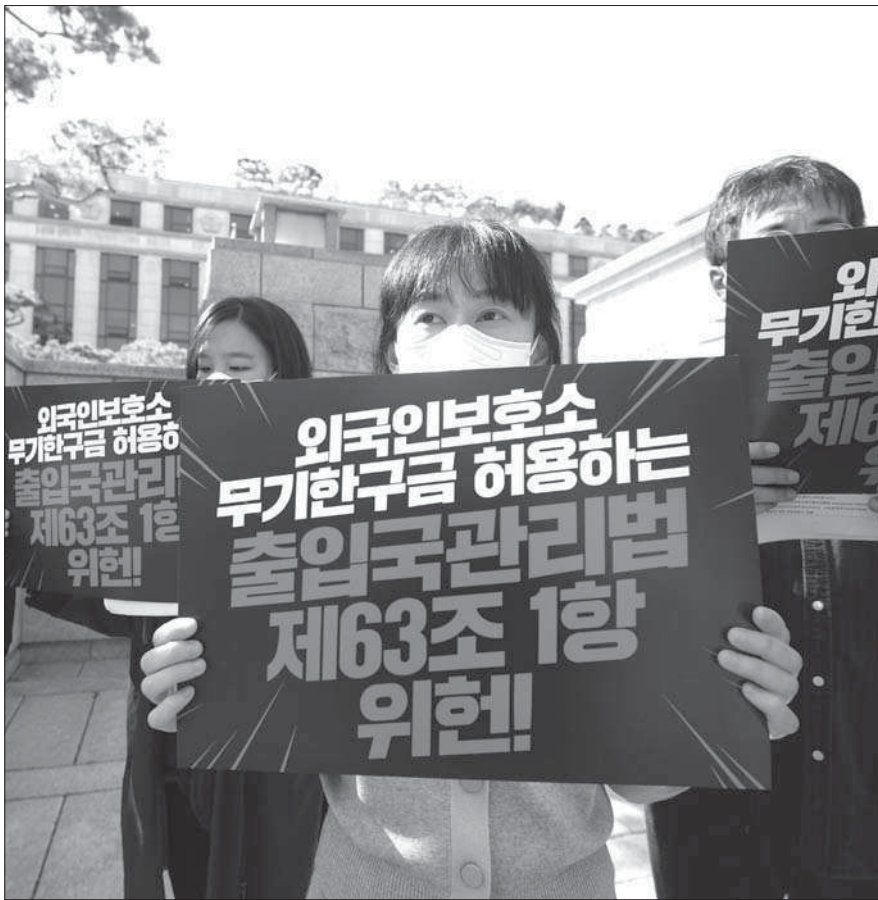
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이런 이주민들을 출국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다.

변론에서 위헌제청 측 변호인단은 외국인보호소가 교도소와 다름없으며 그 열악한 실상을 생생하게 폭로했다.

쇠창살이 쳐진 보호실 내 방은 1인당 평균 공간이 1.84평에 불과하고, 15명 가량의 인원이 한 방에서 화장실 하나를 두고 생활한다. 또 마치 수형자처럼 등에 “보호외국인”이라고 적힌 동일한 보호복을 입히고, 민사재판에 출석할 때도 수갑을 채워 호송해 법정에서야 풀어 주는 등 모욕적으로 대우한다.

특히, 지난해 화성외국인보호소 당국이 구금된 모로코인 난민에게 ‘새우튀기’ 고문을 한 사건으로 보호소 내 인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드러났다.

이런 곳에 연간 3만 명 가까운 이주민들이 구금된다. 다수는 10~25일 정도 구금된 뒤 출국되지만, 3개월 이상 장기 구금되는 이주민도 2021년 기준 월



10월 13일 현재 앞에서 열린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 위헌 촉구 기자회견

평균 233명에 이른다.

제청신청인 중 한 명인 이집트인은 구금 당시 만 17세 청소년이었다. 그는 미성년자 혼자 왔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이 거부된 뒤 보호소에 구금됐다고 한다. 같은 방에 모국어어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구금돼 있던 한 달 동안 단 한 마디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만 4세 아동이 구금된 적도 있는데, 하루 30분의 야외 운동 시간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울면서 버텼다고 한다. 이 아동은 구금에서 풀

려난 후에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거짓말

법무부 측은 외국인보호소 구금에 기한을 두면 미등록 이주민들이 출국을 거부하며 버티다 석방돼 범죄를 일으키거나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모두 거짓말이다.

공식 통계를 보면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절반에 불과하다.

법무부 측은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되는 이주민 대다수가 범죄 경력이 있다며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이미 징역으로 치르고 보호소로 이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소 구금은 이중처벌이다.

또 이주민 증가와 내국인 실업률 사이에는 인과관계는커녕 상관관계도 없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직후, 한국의 이주민 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거꾸로 2010년대 내내 이주민 수가 꾸준히 증가했지만 실업률은 큰 변동이 없었다.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이주민이 아니라 해고, 임금과 복지 삭감, 민영화 등 정부와 기업주들이 내리는 결정이다. 이를 이주민 탓으로 돌리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

사실 정부는 노동력 수요에 따라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완화하거나 강화하기를 반복해 왔다. 정부는 출입국 통제를 이용해 이주민들에게 열악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필요 없으면 내쫓으려 하고, 난민과 같이 책임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입국을 막으려 한다.

정부는 바로 이 때문에 외국인보호소 구금에 기한이 생겨 출입국 통제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침해도 마다하지 않으려 한다.

변론 후 위헌제청 측 변호인단은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6140명의 온라인 서명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해야

한편, 위헌제청 측 변호인단의 논리에는 약점도 있었다. 단속된 미등록 이주민을 추방할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보호소 구금에 기한을 두고, 그 기한에 도달해 석방하더라도 출국을 보증할 조치는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TT, GPS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비구금적 수단의 효용성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외국인보호소 장기 구금에 비

하면 고통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을 인정하게 되면 석방된 이주민의 삶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것이다. 또 정부가 그런 조치를 더 강화하거나 석방된 이주민을 잠재적 위험인물 취급하는 것에 일관되게 맞서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그 연장선에서, 변호인단은 정부의 난민법 개악안을 반대하면서도 그 입법 목적 자체는 반대하지 못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난민 심사에서 한 번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재신청을 어렵게 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른바 ‘가짜 난민’이 체류 연장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것을 막겠다는 말이다.

‘가짜 난민’과 ‘진짜 난민’을 선별해야 한다는 논리를 수용하면, 그 권한을 전 정부의 자의성을 막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미등록 이주민을 무조건 합법화하라는 요구에서 출발해 외국인보호소 구금에도 반대해야 한다.



합의 번복하려는 윤석열 정부

화물 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을 하려 하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활상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올해 6월 화물연대와 한 합의를 뒤집으려 한다. 노동자들은 행동에 나서려고 준비하고 있다.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아 월 소득(운송료)이 200만~300만 원씩 줄어든 화물 노동자들은 6월 초 파업으로 고통 전가에 맞섰다. 8일간의 전국적 파업은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냈다.

집권하자마자 저항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는 직접 협상에 나서 부분 양보를 약속해야 했다. 유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최소한의 임금(운송료) 수준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안전운임제는 현재 일부 화물 품목(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되고 있는데, 지난 3년여간 운송료가 인상되는 효과를 냈다.

그런데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화물 노동자의 6.5퍼센트 가량으로 한정돼 있는데다 그조차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 관련법이 제정될 때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일몰제). 그래서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 적용을 전 차종·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는 생활 수준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지속되고 있고,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으로 유가가 다시 뛸 수 있는 상황이다.

노골적

그런데 안전운임제 일몰 시점이 두 달 남짓 남은 지금, 시간만 질질 끌어



화물 노동자들은 지난 6월 8일간의 파업으로 경제적·정치적 효과를 내는 위력을 보여 줬다. 사진은 5월 말 열린 파업 결의대회

온 윤석열 정부는 합의 이행은커녕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엔 기업주들(화주)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에 열린 국회 민생특위(민생경제안전특별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기업주들에게 적정 운임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거나, 관련법 위반시 기업주들에게 부과되는 “처벌이 과도하다”는 등의 말을 쏟아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거들었다.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이미 두 달 전에 그런 속내를 내비쳤었다. 안전운임제가 노동자들에게만 “편향적으로” 이롭고 “운임 산정의 객관성도 부족”하다며 개악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들이 “시장 경제 원리” 운운하는 것

은 사실상 노동자들에게 운송료 인상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과 같이 저임금과 과로 등 열악한 조건을 감내하라는 것이다.

경제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지정학적 불안정도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호하려고 혈안이다. 이를 위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이다.

민주당의 배신

6월 화물연대 파업 직후 민주당과 정의당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일부)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발의했다.

그런데 이를 1호 법안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던 민주당은 오히려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민생특위 성원으로 직접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민주당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여야 합의

와 조율”을 말하며 “모두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리 김을 빼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화물 노동자들은 “여야 모두 민생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민주당만 믿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한다.

화물 노동자들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합의를 뒤집고 지금의 안전운임제마저 폐지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기업주 책임이나 처벌을 완화해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을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런 문제를 폭로·규탄하며 다시 투쟁 준비에 나섰다. 10월 22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파업 결의를 위한 조합원 비상 총회를 대규모로 연다.

수출입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김성진 화물연대 금강지회장은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기싸움하기 바빠서 노동자들의 생활고 해결은 뒷전이에요. 윤석열도 대기업이나 경제인 단체들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문에서 일하는 김종열 화물연대 광주 카게리어 지회장도 이렇게 각오를 밝혔다. “화물 노동자들이 17년 동안 힘겹게 싸워서 겨우 얻어 낸 안전운임제입니다. 안 그래도 고유가로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이(끝내) 안전운임제를 없애려 한다면 다시 한번 싸울 것입니다.”

생계비 위기와 윤석열 정부의 합의 번복과 고통전가에 맞서 다시 투쟁을 시작하는 화물 노동자들을 지지하자.

안우춘

온라인 토론회

본평등, 능력주의, 공정

《평등》(제2권) 출간 기념
알렉스 캘리니코스 초청 토론회

평등을 원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11월 1일(화) 오후 8시

유튜브 생중계

노동자연대TV 라이브

전문 통역사의 순차통역 제공

노동자연대 TV X 도세환 책간피

QR 코드

노동자연대 TV

기획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5강 시진핑 체제의 성격과 위기

일시 | 10월 25일(화) 오후 8시

발제 | 이정구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객원연구원, 중국 경제 전문가

참가신청

bit.ly/1025-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가능]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QR 코드